

자료번호	A1-2013-0061
자료명	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성과 및 개선방안 조사, 2013 : 기존 관리업체

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제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설문조사

목표관리제 관련 실무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

환경부에서 발주한 「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제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」 과제를 맡게 된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윤순진입니다.

본 연구는 2015년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라 기존에 시행 중인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제 성과를 평가하고,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하고 있습니다.

향후 온실가스 감축 정책 중 목표관리제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는데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.

여러분의 인적사항은 어떠한 경우라도 공개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

2013년 1월 30일

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윤 순 진 올림

※ 이 조사는 환경부의 의뢰를 받아 수행되었습니다.

문의 : 박사과정 원길연

II.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과정

■ 다음은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제의 감축목표 설정의 적절성에 관한 질문입니다. (2번, 하위 질문 포함)

번호	질문	매우 낮다	낮다	적절하다	높다	매우 높다
2	정부가 할당하는 귀 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?	①	②	③	④	⑤

2-1. 목표관리제 감축목표 설정 과정에서 무엇이 가장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?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.

- ① 업체의 성장률 산정에 대한 업체와 관장기관 간 의견 차이 조정
- ② 목표설정을 위한 충분한 협상 기간 확보
- ③ 감축 목표 결정을 위한 정확하고, 충분한 정보 확보
- ④ 감축목표 설정 협의과정에 참여하는 관장기관 담당자의 잦은 교체 지양
- ⑤ 업종별 감축잠재량을 반영한 업종별 감축률의 적정성 검토
- ⑥ 업종별 예상배출량 산정에서 의견수렴 절차 확보
- ⑦ 기타()

■ 다음은 귀사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. (3번~6번)

3. 귀사는 목표관리제에서 주어진 감축 목표 외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장기 감축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?

- ① 예
- ② 아니오
- ③ 검토/수립 중

4. 귀사는 온실가스 감축 이행목표 달성을 위해 어떠한 방안으로 대응하고 있습니까? 해당되는 내용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.

- ① 회사 규정(지침이나 매뉴얼 등) 마련
- ② 에너지원의 교체
- ③ 온실가스 배출 설비나 장비 교체
- ④ 생산 공정 개선
- ⑤ 건물 단열강화로 에너지 효율성 개선
- ⑥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
- ⑦ 점심시간 소등, 개인전열기 사용금지, 실내 적정 온도 유지 등 행태개선 활동 강화
- ⑧ 전담부서 설치
- ⑨ 전담인력 배치
- ⑩ 기타 ()

▣ 다음은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시 업무 의사소통과 관련한 질문입니다. (8번~10번)

10. 귀사는 목표관리제 이행을 위해서 어느 기관과 가장 활발하게 의사소통하십니까? 가장 활발하게 의사소통하는 기관을 **최대 세 곳을** 골라 우선순위를 적어 주십시오. 최대 3곳이므로 의사소통하는 복수의 대상기관이 없을 시 공란으로 두셔도 됩니다.

(※ 보기 항목들 중 최대 세 가지를 골라 맨 오른쪽 괄호 안에 1순위, 2순위, 3순위를 기록하여 주십시오.)

- ① 관장기관 ()
- ② 관장기관 위임기관(에너지관리공단, 환경공단 등) ()
- ③ 정부 출연 연구기관(에너지경제연구원,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) ()
- ④ 기업 부설 연구기관(포스코 경영연구소, 삼성 지구환경연구소 등) ()
- ⑤ 비영리 연구기관(기후변화행동연구소,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등) ()
- ⑥ 컨설팅 업체 ()
- ⑦ 대학 ()
- ⑧ 경제 단체(전국경제인연합회, 대한상공회의소, 한국무역협회, 중소기업협동조합, 한국경영자총협회) ()
- ⑨ 업종별 협회(철강 협회, 한국석유화학협회, 한국시멘트협회 등) ()
- ⑩ 관련 언론 매체(잡지, 신문, 방송 등) ()
- ⑪ 기 타 (_____)

11. 귀사는 목표관리제 이행과 관련하여 10번에서 답한 기관들과 어떠한 사안으로 주로 의사소통하십니까? 한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.

- ① 감축목표 조정
- ② 구체적 감축방법
- ③ 명세서 세부 내용 작성
- ④ 이행계획서 세부 내용 작성
- ⑤ 온실가스 관련 정보 공개 범위
- ⑥ 목표관리제 이행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/패널티
- ⑦ 기 타 (_____)

12. 목표관리제 운영시 정부, 관장기관과 보다 활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? 한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.

- ① 의사소통 절차 간소화
- ② 담당자들의 잦은 교체 지양
- ③ 목표관리제 제도 이해를 위한 매뉴얼 작성
- ④ 제도 운영을 위한 관장기관의 충분한 대응인력 확보
- ⑤ 관장기관-기업체 간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회의체(포럼, 워크샵 등) 운영
- ⑥ 기타 ()

III.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성과

■ 다음은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른 효과에 대한 질문입니다. (13번~15번)

13. 귀사가 목표관리제 운영으로 인해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면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? 가장 긍정적인 것부터 **두 가지**를 골라 순서대로 적어 주십시오.

(※ 보기 항목들 중 두 가지를 골라 맨 오른쪽 괄호 안에 1순위, 2순위를 기록하여 주십시오.)

- ①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에너지 비용이 절감되었다.()
- ② 생산 효율성을 높여 기업의 경쟁력이 상승하였다()
- ③ 향후 배출권거래제도로의 전환에 앞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()
- ④ 제도 운영으로 인한 사업장 경영인들의 환경 인식이 높아졌다()
- ⑤ 제도 운영으로 인한 사업장 노동자들의 환경 인식이 높아졌다()
- ⑥ 기업 이미지가 제고되었다()

14. 귀사가 목표관리제 운영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면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? 가장 부정적인 것부터 **두 가지**를 골라 순서대로 적어 주십시오.

(※ 보기 항목들 중 두 가지를 골라 맨 오른쪽 괄호 안에 1순위, 2순위를 기록하여 주십시오.)

- ① 생산비용을 높여 기업의 경쟁력을 하락시켰다()
- ②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대한 나쁜 인식이 형성되어 감축정책의 추진에 어려움이 생겼다()
- ③ 명세서 작성 등으로 인해 기업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다.()
- ④ 목표관리제 목표 달성 방안이 기업의 성과 관리 방안과 마찰을 불러 일으킨다.()
- ⑤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해 추가적인 인력 투입과 충원이 필요하다. ()
- ⑥ 추가 예산 확보가 어려워 다른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한다. ()

15. 귀사에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봤을 때 어떠한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?

- ① 긍정적 영향이 더 컸다.
- ② 부정적 영향이 더 컸다.
- ③ 긍정적이지도, 부정적이지도 않다.

IV.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제 향후 운영방안

■ 다음은 목표관리제에 대한 귀사의 입장에 영향을 미친 환경요인에 관한 질문입니다. (16번)

16. 다음의 주변 집단 중 목표관리에 대한 귀사의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곳을 순서대로 **두 가지**를 골라 우선순위를 적어 주십시오.

(※ 보기 항목들 중 두 가지를 골라 맨 오른쪽 괄호 안에 1순위, 2순위를 기록하여 주십시오.)

- ① 총괄기관(환경부) ()
- ② 관장기관(지식경제부, 환경부, 국토해양부, 농림수산식품부) ()

- ③ 경제 단체(전국경제인연합회, 대한상공회의소, 한국무역협회, 중소기업협동조합, 한국경영자총협회) ()
- ④ 업종별 협회(철강 협회, 한국석유화학협회, 한국시멘트협회 등) ()
- ⑤ 경쟁업체 ()
- ⑥ 노동조합 ()
- ⑦ 관련 언론 매체(잡지, 신문, 방송 등) ()
- ⑧ 환경 NGO ()
- ⑨ 국내·외 투자자 ()

■ 다음은 목표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. (17번~19번)

17. 정부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개선 사항을 **하나만** 선택하십시오.

- ① 목표관리제 상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대상기관 예산지원 확대
- ② 상쇄제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추진
- ③ 성과에 대한 평가체계 합리화
- ④ 목표관리제 운영의 단순화
- ⑤ 목표관리제에 대한 정부, 기관 실무자들의 이해도 개선
- ⑥ 정부와 기관 간 의사소통 방식 개선
- ⑦ 목표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확대
- ⑧ 정부의 정책 의지 강화
- ⑨ 기타 ()

18.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**업체 선정 기준**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?

- ① 125,000 tCO₂eq./500TJ 이상 업체 (현행)
- ② 87,500 tCO₂eq./350TJ 이상 업체 (2013년부터 대상)
- ③ 50,000 tCO₂eq./200TJ 이상 업체(2014년부터 대상)
- ④ 그 이하도 산업 부문은 단계별로 모두 대상이 되어야 함
- ⑤ 그 이하도 배출 부문에 관계없이 단계별로 모두 대상이 되어야 함
- ⑥ 기 타 (_____)

18-1.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**사업장 선정 기준**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?

- ① 25,000 tCO₂eq./100TJ 이상 업체 (현행)
- ② 20,000 tCO₂eq./90TJ 이상 업체 (2013년부터 대상)
- ③ 15,000 tCO₂eq./80TJ 이상 업체(2014년부터 대상)
- ④ 그 이하도 산업 부문은 단계별로 모두 대상이 되어야 함
- ⑤ 그 이하도 배출 부문에 관계없이 단계별로 모두 대상이 되어야 함
- ⑥ 기 타 (_____)

19. 목표관리제에서 상벌제 개선방안으로 어떤 방법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?

- ① 현행 수준의 패널티가 적절하다.
- ② 목표 미달성 단계별로 차등적인 패널티가 필요하다.
- ③ 인센티브를 늘리되, 목표 달성 단계별로 차등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.
- ④ 인센티브를 늘리되, 추가달성 정도에 상관없이 동일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.
- ⑤ 기 타 (_____)

■ 다음은 배출권거래제도로의 도입에 관한 질문입니다. (20번, 하위 질문 포함)

20. 귀사는 배출권거래제도 시행 대상입니까?

- ① 예(☞ 20-1번 문항에 응답하십시오.)
- ② 아니오(☞ 21번 문항에 응답하십시오.)

※ 2015년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의무참여업체 기준은 배출 업체의 경우 연간 125,000tCO₂ 이상, 배출사업장의 경우 25,000tCO₂ 이상이다.

20-1. 귀사는 배출권거래제도로의 전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- ① 찬성(☞ 20-2번 문항에 응답하십시오.)
- ② 반대(☞ 20-3번 문항에 응답하십시오.)
- ③ 잘 모르겠음(☞ 21번 문항에 응답하십시오.)

20-2. 귀사가 배출권거래제로의 전환에 대해서 찬성한다면 그 이유를 두 가지만 선택해주십시오.

- ① 목표관리제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 비용이 저렴하다.
- ② 배출권거래제가 목표관리제에 비해 실무가 더 간편하다.
- ③ 온실가스 감축분의 예치와 이월이 가능하므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.
- ④ MRV를 보다 충실히 함으로써 해외 규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.
- ⑤ 배출권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.
- ⑥ 국제 배출권 시장에 준비할 수 있다.
- ⑦ 녹색경영 및 녹색마켓에 대한 CEO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.
- ⑧ 기타 ()

20-3. 귀사가 배출권거래제로의 전환에 대해서 반대한다면 그 이유를 두 가지만 선택해주십시오.

- ① 목표관리제보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.
- ② 목표관리제로도 충분히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.
- ③ 배출권거래제 운영 과정이 목표관리제에 비해 더 복잡하다.
- ④ 관련 전문가가 회사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.
- ⑤ 처음 운영하는 제도여서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이 불확실하다.
- ⑥ 배출권 거래 가격이 유동적이어서 위험 부담이 크다.
- ⑦ 의무감축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시기상조다.
- ⑧ 기타 ()

■ 다음은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목표관리제 운영방식 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. (21번~27번)

21. 향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참여하는 관리업체를 확대할 경우, 그 초기 단계에 있어서 다음 중 어떠한 방식의 이행 과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한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.

※ 의무보고제란 의무적인 감축목표를 산정해서 발생하는 법적 강제사항 없이 배출량 통계만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.

- ① 먼저 자발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을 관리한 후, 6개월 후 의무제도로 변경
- ② 먼저 자발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을 관리한 후, 1년 후 의무제도로 변경
- ③ 먼저 자발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을 관리한 후, 2년 후 의무제도로 변경
- ④ 먼저 자발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을 관리한 후 대상 사업체의 의견을 고려하여 의무제도로 변경
- ⑤ 의무적인 목표 설정 및 이행 관리를 규정한 제도를 바로 실시
- ⑥ 기 타 (_____)

22. 2015년에 배출권거래제가 도입예정인데, 배출권거래제가 도입 후 목표관리제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? 한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.

- ① 배출권거래제 미참여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목표관리제를 그대로 유지한다.
- ②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후 6개월 정도만 목표관리제를 존속시킨다.
- ③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후 1년 정도만 목표관리제를 존속시킨다.
- ④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했으므로 즉시 목표관리제를 폐지한다.

23.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가 병행된다면, 배출권거래제로 전환되지 않는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나 사업장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?

- ① 현행 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면서 인센티브 추가 부여
- ② 배출권 거래제 미참여 업체에 대해서만 감축목표 없이 의무보고제도로 전환
- ③ 산업계 전반에 대해 감축목표 없이 의무보고제도로 전환
- ④ 기타(_____)

24 . 목표관리제를 향후 의무보고제로 전환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한지 **하나만** 선택해주십시오.

- ① 목표관리제 각종 보고서(명세서, 이행계획서 등) 작성 지원
- ②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 개발 R&D 지원
- ③ 사업장 목표관리 담당인력에 대한 교육 지원
- ⑥ 외부 전문가 파견 지원
- ③ 시설 투자비 세제 지원
- ④ 시설 투자비 용자 시 금리 인하
- ③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(R&D) 지원
- ④ 기타(_____)

25 . 목표관리제를 향후 의무보고제로 전환할 때 패널티를 부여한다면 어떤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?

- ① 현재 수준의 패널티 유지
- ② 현재 보다 강화
- ③ 현재보다 약화

26. 현행 목표관리제도 대상을 확대한다면 어떠한 기관/부문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?
(보기 응답 중 해당되는 내용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.)

- ① 민간/상업용 건물
- ② 민간/상업용 차
- ③ 소규모 산업체
- ④ 대규모 주거단지(아파트단지 등)
- ⑤ 확대할 필요가 없다.

27. 현재 목표관리제 대상이 아닌 기관이나 부문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어떻게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?

- ① 현행 목표관리제를 현재의 미시행 대상 모두에 확대
- ② 현행 목표관리제에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현재의 미시행 대상 모두에 확대
- ③ 현행 목표관리제에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민간부문의 건물과 차에 대해서만 확대
- ④ 현행 목표관리제에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소규모 업체 및 사업장에 대해서만 확대
- ⑤ 배출권 거래제 미참여 업체 모두에 대해 감축목표 없이 의무보고제도로 전환
- ⑥ 감축목표 없이 의무 보고제로 전환하되, 시행대상을 민간부문의 건물과 차에 대해서만 확대
- ⑦ 감축목표 없이 의무 보고제로 전환하되, 시행대상을 소규모 업체 및 사업장에 대해서만 확대
- ⑧ 기타()

▣ 다음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 수단에 대한 선호를 묻는 질문입니다(28~29번).

28. 아래 온실가스 감축 정책 수단들 중에서 귀사가 선호하는 정책들의 우선순위를 순서대로 적어 주십시오.

- ① 탄소세 ()
- ② 목표관리제 ()
- ③ 배출권거래제 ()
- ④ 자발적 협약 ()

※ ‘탄소세’는 이산화탄소 배출의 원천이 되는 화석연료에 함유되어 있는 탄소량에 비례하여 단위 탄소 당 일 정액의 세금을 화석연료에 부과하는 방식과, 배출원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에 비례하여 단위 탄소 당 부 과하는 방식의 제도를 말한다.

‘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제’는 2010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 실시된 제도로서 정부가 대 규모 사업장(관리기업체)과 공공기관에 온실가스 감축,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에 대한 목표를 설 정하고 이행을 관리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이다.

‘배출권거래제’는 교토의정서에서 경제적 수단을 통한 감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제시된 제도로서 국가마 다 할당된 감축량 의무달성을 위해 자국의 기업별, 부문별 배출량을 할당하고 기업들은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다른 나라 기업들로부터 할당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.

‘자발적 협약’은 기업, 사업장과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, 감축방안, 정부지원 규모 등을 자발적으로 협 의하여 결정하는 비규제적 정책수단이다.

29. 28번에 제시된 정책 수단 이외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운영하였으면 하는 방안이 있다면 어 떠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겠습니까? 아래 빈 칸에 자유로이 적어 주십시오.

(_____)

VI. 응답기관의 기본정보

30. 귀사는 어느 범주에 포함됩니까?

- ① 대기업 ② 중소기업 ③ 기타 ()

31. 귀사는 어느 업종에 포함됩니까?

- ① 정유 ② 석유화학 ③ 제지목재 ④ 발전에너지 ⑤ 철강 ⑥ 반도체 ⑦ 기계
⑧ 식료품 ⑨ 음료제조업 ⑩ 시멘트 ⑪ 요업 ⑫ 자동차 ⑬ 조선 ⑭ 광업
⑮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⑯ 통신 ⑰ 비철금속 ⑱ 수도 사업
⑲ 하수, 폐수 및 분뇨처리업 ⑳ 지정 외 폐기물처리업 ㉑ 섬유 ㉒ 기타 제조
㉓ 수송 ㉔ 건물 ㉕ 기타 ()

32. 현재 귀사의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제도 관장기관은 어디입니까?

- ① 국토해양부 ② 농림수산식품부 ③ 지식경제부 ④ 환경부

33. 귀사의 지난 3년간 평균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어느 정도입니까?

- ① 50,000t CO₂eq. 미만
② 50,000t CO₂eq. 이상 ~ 87,500t CO₂eq. 미만
③ 87,500 tCO₂eq. 이상 ~ 125,000t CO₂eq. 미만
④ 125,000t CO₂eq. 이상 ~ 1,000,000t CO₂eq. 미만
⑤ 1,000,000t CO₂eq. 이상

34. 귀하는 귀사에서 목표관리제 업무를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 업무를 하신 기간이 얼마나 되십니까? ()년 ()개월

* 모바일 상품권 발송을 위한 설문 응답자 핸드폰 정보 기재 요청

(설문에 응답하여 주신 분들께 모바일 상품권 5,000원 권을 보내드립니다. 귀하의 핸드폰 번호는 연구윤리와 개인정보보호에 의해 철저히 비밀을 유지합니다.)

(H.P:)

※ 설문에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